VOL. 12 NO. 1 2026 SPRING

SUNGSHIN ECONOMIC RESEARCH

JOURNAL

ECONOMICS • FINANCE • POLICY

Insight for a Sustainable Tomorrow



SUNGSHIN ECONOMIC RESEARCH ASSOCIATION

경제를 읽고,
생각을 나누다

경제를 '읽는 것'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2026년 상반기에 국제·국내 경제는 고금리와 고환율이 지속되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경제 현상들은 단발성 논의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계, 기업, 정부 등의 의사결정과 국가 경제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성신경제연구학회는 단순히 경제 뉴스를 소비하는 데서 나아가, 뉴스의 핵심 내용과 맥락을 스스로 정리하고 분석해 보고자 1학기 신문 스크랩 활동을 기획했다.

본 스크랩 활동은 거시경제, 통화·재정 정책, 금융, 노동 등 주요 분야의 기사를 직접 수집·요약하며 현재 한국 경제의 주요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가진다.

나아가 기사 요약, 용어 정리, 개인 비평, 추가 자료 검색, 팀원 간 댓글 토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주도적으로 경제 지식을 확장하고 각자 시각을 공유하고자 했다.

하나의 기사를 여섯 단계로 깊이 읽다

본 스크랩 활동은 단순한 기사 수집에 그치지 않고, 경제 이슈를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학습하기 위해 총 6단계로 진행되었다. 학회원들은 매주 각자 선정한 주요 경제 기사를 바탕으로 아래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며 기사의 맥락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학습했다.

- **STEP 1** 기사 선정 및 링크 공유

언론 보도 및 정책 기사 중 시의성이 높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 뉴스를 선정한다. 또한 팀원 누구나 원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 제목과 함께 정확한 출처와 URL 링크를 함께 수록한다.

- **STEP 2** 기사 핵심 내용 요약

수집한 기사는 핵심 사실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5줄 내외로 간결하게 요약한다. 기자나 언론사의 주관적 표현은 배제하고, 핵심 수치와 정부 발표 등 객관적인 정보 위주로 정리하여 기사의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STEP 3** 키워드 및 용어 정리

기사 내에 등장하는 생소한 경제 용어나 핵심 개념을 찾아 정리한다. 기사를 읽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사전 학습함으로써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술 기반을 다진다.

- **STEP 4** 기사에 대한 개인 비평 작성

단순한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기사에서 다룬 경제 현상의 원인, 정책의 한계점,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작성자 본인만의 시각으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다.

- **STEP 5** 연관 기사 탐색 및 심화 공부

메인 기사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관 기사, 반대 입장의 칼럼, 관련 통계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한다. 이를 통해 동일한 이슈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구조적 배경을 넓게 포착한다.

- **STEP 6** 의견 공유 및 토의 주제 도출

작성된 스크랩을 공유한 후, 다름 팀원들이 비평에 대한 피드백이나 본인의 견해를 자유롭게 댓글로 남긴다.

우리가 주목한 세 가지 경제 키워드

본 학회에서는 1학기 동안 다룬 기사와 칼럼을 주요 경제 쟁점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로 분류했다. 개별 기사에서 다뤄진 다양한 경제 현상을 주제별로 묶어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이슈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고 한 학기 동안의 스크랩 활동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제 분류	주요 기사 및 키워드
거시경제와 정책 딜레마	고환율과 원화 약세, 미 FOMC의 고금리 기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국제유가 상승, 국가부채 증가 경고
금융의 공공성과 시장 자율성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논란, 신용점수와 대출금리의 역전 현상, 여신시스템 개편 압박, 결제 플랫폼 시장 변화
노동 양극화와 자산·소비 변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자산효과와 주식·소비의 불균형, 청년층의 '앱테크' 확산

주제1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의 딜레마

주제 개요

미 연준의 고금리 기조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동시에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환율 안정과 경기·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적 딜레마가 부각되었다. 이에 고환율의 원인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관련 기사를 선정해 분석했다.

기사 제목

- 「원화 하락폭, 亞 통화 중 최대…외국인 증시 탈출이 기름 부어」
- 「1530원 넘긴 환율에…한은 "외환시장 쏠림 뚜렷하면 대응할 것"」

기사요약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530원 선까지 상승하며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환헤지 비용 증가와 국민연금 수익률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한국은행은 당시 상황을 달러 조달 자체가 어려운 유동성 위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주식 매도와 시장 쏠림 현상으로 환율 상승세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 키워드 & 추가 학습

• 외환·금융 지표: 달러인덱스, 실질실효환율, 환차손, 리밸런싱
• 시장 자금 및 제도: 패시브 자금, 환헤지, RIA, WGBI
• 추가 학습: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면, 대외 구매력 감소와 통화가치 저평가를 의미할 수 있다. 또한 WGBI 편입은 외국인 채권 투자 확대를 통해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지만, 대외 충격 발생 시 자금 흐름과 금융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다.

주요 비평 및 팀원 토론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없어 직접적인 위기가 아니라는 한국은행의 당초 입장에 대해, 환율 상승이 가져오는 실물경제 및 민생의 파급효과를 간과한 지적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공유했다. 특히 1,530원을 넘어선 고환율은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수입 물가 자극, 실질 소득 감소, 그리고 한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매력도 저하(코리아 엑시트)로 이어지는 심각한 위기 신호로 진단되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 확대나 RIA 도입 등의 대응책은 단기적인 수급 조절용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오히려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학회원들은 대외 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 성장성 둔화, 한·미 금리 격차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원화 가치의 하락세를 막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이는 후속 활동에서 "대외 거시 충격과 한·미 금리 격차 심화 속에서 한국 통화·재정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핵심 토의 주제로 발전했다.

주제2

금융의 공공성 vs 시장 시스템의 신뢰성

주제 개요

고금리 지속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과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는 금융시장의 원칙 간 충돌이 심화되었다. 중저신용자 대출 강제, 대출금리 역전 현상, 결제 시장 주도권 이동 등을 통해 정부 개입의 타당성과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 및 건전성을 둘러싼 구조적 쟁점을 파악해보고자 본 주제를 선정했다.

기사 제목

• 「李대통령 “중저신용자 대출, 금융사 선의 말고 제도로 강제해야”」
• 「“신용점수 높은데 이자 더 내라니”…상식 깨진 대출금리 무슨 일?」
• 「李 "왜 銀 1등급만 대출하나" 압박… 금융위 銀 여신시스템 손본다」
• 「“수수료 까고 나니 눈치싸움 후끈”…‘카드→플랫폼’ 결제 주도권 이동 신호탄」

기사요약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와 제1금융권 탈락 후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금리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여신심사 체계 개선, 연체채권 소멸시효 제한 등 포용금융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상생금융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고신용자의 우대금리가 축소되고 일부 구간에서는 저신용자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한편 결제시장에서는 수수료 공시제 도입과 간편결제 확산을 배경으로 빅테크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 카드사와 빅테크 간 결제시장 주도권 및 금융시장 지배력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핵심 키워드 & 추가 학습

• 포용금융 및 여신 제도: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금리 단층(그레이존), 연체채권, 소멸시효
• 시장 역동성 및 결제 지표: 금리 역전, 가계대출 규제, 지급결제시장, 디스인터미디에이션, 네트워크 효과
• 추가 학습: 정책 개입에 따른 금리 역전 현상은 성실한 신용관리의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빅테크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는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편의성과 선택지를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독점과 데이터 집중에 따른 시장 지배력 강화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주요 비평 및 팀원 토론

포용적 금융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가격 메커니즘 왜곡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성실히 신용을 관리해온 고신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금리 역전 현상이나 부실 채권 처리 위험을 은행에 강제하는 방식은 신용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이러한 인위적 규제는 결국 부실 비용을 전체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으로 전가시킬 위험이 크므로, 단순한 대출 규모 확대 강제보다는 정교한 신용평가 체계 구축과 정부의 직접적인 보증 등 위험 분담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나아가 빅테크 플랫폼의 결제 시장 독점 우려와 맞물려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시장의 자율적 신용 원칙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로 이어졌다.

주제3

노동 양극화, 자산효과, 분배의 공정성

주제 개요

고물가·고금리 및 대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 주요국 대비 낮은 한국의 주식 자산효과, 2030 세대의 소액 재테크(앱테크) 열풍,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고물가 고착화 현상 등을 통해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와 '자산·소비 분배의 공정성'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본 주제를 선정했다.

기사 제목

• 「정규직 3.2% 오를 때 비정규직 1.3%… 임금격차 최대」
• 「주식 1만원 올라도 소비 130원뿐…한은 "韓 자산효과 선진국보다 작아"」
• 「"걷기만 해도 돈 쌓인다"…2030 사로잡은 '앱테크' 뭐길래」
• 「결국 통행료 엔딩?… '호르무즈 톨게이트' 전망에 증시 뛴 이유」

기사요약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65.2%에 그치며 격차가 10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고,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정수당 제도를 제시했다. 한편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국내 증시 호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변동성과 부동산 자산으로의 수익 재유입 구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자산효과는 미국·유럽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물가·고금리와 자산 성장 한계 속에서 2030 세대는 일상 활동을 소액 현금화하는 '앱테크'로 자투리 수익을 만드는 생존형 재테크에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시도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은 에너지 비용 및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켜 서민 가계와 내수 소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핵심 키워드 & 추가 학습

- 노동 및 분배 지표: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 사회보험, 시간당 임금총액
- 자산 및 시장 구조: 자산효과, 역자산효과, 자본이득, 레버리지, 앱테크
- 지정학 및 리스크 요인: 리스크온, 디스인터미디에이션, 안보 프리미엄
- 추가 학습: 공정수당과 같은 보완책도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직무 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증시 호황이 소비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배경에는 낮은 주주환원과 부동산 중심의 자산 선호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 비평 및 팀원 토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단순한 임금 격차를 넘어 소득과 복지의 양극화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비정규직이 더 큰 고용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수당과 같은 사후 보전책보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과 직무 가치 중심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주식 수익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이나 앱테크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미래 불안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낮은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수당을 통한 소득 보전의 정당성과 낮은 자산효과가 내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토의를 확장했다.

스크랩에서 칼럼까지

여섯 개의 질문으로 읽어낸 경제

1학기 신문 스크랩 활동은 단순히 경제 뉴스를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기사 속 현상을 읽고, 그 안에서 쟁점을 발견하고 질문을 만들며, 토론을 통해 각자의 관점을 정리한 뒤 하나의 칼럼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여섯 차례의 주제를 통해 노동시장, 통화정책, 금융의 공공성, 자산시장 등 우리 경제가 마주한 주요 쟁점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01. 공정수당, 격차를 줄이는 해법일까?

"국가가 공정수당을 지급해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보전하는 것은 정당한가?"

공정수당이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정규직과의 역차별이나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 간 소득 역전, 기업의 정규직 전환 회피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후적인 소득 보전이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은 없는지 비판적으로 논의했다.

02. 미국을 따라갈 것인가, 국내 경제를 지킬 것인가

"미국의 금리 기조와 국내 실물경제 상황이 충돌할 때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한·미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과 환율·수입물가 상승 위험을 살펴보는 동시에, 높은 가계부채와 내수 부진이라는 국내 여건도 함께 고려했다. 그 결과 대외 여건을 고려하되,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을 조정하는 유연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발전시켰다.

03. 포용금융, 어디까지가 금융의 역할일까

"금융기관의 공공성에서 더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의 기회 확대인가, 시스템의 신뢰성 유지인가?"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무리한 대출 확대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의 신용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다. 취약계층 지원은 금융기관에 위험을 집중시키기보다 정부·정책금융기관의 보증과 대안 신용평가 체계를 통해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04. 주식이 올라도 소비가 늘지 않는 이유

"한국 경제의 낮은 자산효과는 득일까, 실일까?"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으로 주식 수익이 장기적인 자산 증가보다 일시적 이익으로 인식되고, 투자 수익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살펴보았다.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주주친화정책과 부실기업 관리 등을 통해 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자산효과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05. 온기는 고르게 흐르고 있는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사이에 놓인 '그레이존' 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대출 확대를 요구할 경우 손실과 위험이 민간이나 예금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와 보증 기능 강화가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06. 회색지대의 두 얼굴

CB·BW 등 메자닌 금융은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지만, 동시에 규제를 우회하거나 주가 희석과 시세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메자닌 시장의 양면성을 살펴보고, 공시 강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자금조달과 불공정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시장 감시 체계의 필요성을 짚었다.

뉴스를 읽는 데서,
질문을 만드는 데까지

신문 스크랩과 칼럼 집필은 뉴스를 단순히 소비하는 활동에서 벗어나, 경제 현상 뒤에 숨은 구조적 원인과 정책적 딜레마를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하나의 기사에서 출발해 질문을 만들고, 관련 자료와 지표를 찾아보며, 학회원들과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 생각을 논리적인 글로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경제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뿐 아니라 문제의식 도출, 자료 탐색, 논리적 글쓰기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2학기 학술 논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신문 속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 고민이, 보다 깊이 있는 연구 주제로 확장된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바꾸는 경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술 혁신이 던진 새로운 경제적 질문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디지털 자산의 확산,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경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통화주권과 금융 안정성의 문제로, AI 투자 자문은 투자 효율성과 시장 왜곡의 문제로, AI·로봇의 확산은 소득 분배와 조세 정의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성신경제연구학회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과 노동시장, 조세체계 등 경제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래 경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선정하고, 각 주제를 찬성과 반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각 팀은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논거를 구성하고, 입론·반론·재반론을 거치며 서로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단순히 한쪽의 정답을 찾기보다 기술 혁신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 사이의 균형점을 고민하고, 하나의 경제 현상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세 가지 질문으로 보는 미래경제

01 디지털 원화의 미래

한국은행 CBDC와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어떤 모델이 통화주권과 혁신을 함께 지킬 수 있는가?

02 생성형 AI 투자 자문

AI가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자 효율을 높일까, 아니면 군집 행동과 책임 공백을 키울까?

03 AI, 로봇 과세

자동화가 낳는 불평등과 세수 공백을 보완할 것인가,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가 될 것인가?

우리가 주목한,
세 가지 미래경제 쟁점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금융·투자·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주제는 기술의 효율성과 공공성, 시장의 자율성과 제도적 안정성 사이의 긴장을 공통적으로 드러낸다.

주제	핵심 쟁점
디지털 원화	CBDC의 공공 신뢰·안정성 vs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경쟁
AI 투자 자문	정보 비대칭 완화·맞춤형 자문 vs 군집 행동·환각·책임 공백
AI·로봇 과세	불평등·세수 기반 보완 vs 혁신 저해·이중과세·자본 이탈

주제1

디지털 원화의 미래

달러 중심의 글로벌 결제망 확대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에 대응해, 한국 경제에 적합한 디지털 원화 발행 모델을 논의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정부 감독 아래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CBDC 측 핵심 논거

- 통화주권·화폐 단일성

공적 발행 주체를 통해 원화의 신뢰와 통화주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금융 안정성

민간 코인의 디페깅과 예금자 보호 한계를 줄이고 제도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

- 공공성

스마트계약 기반 바우처 등 정책 목적의 디지털 화폐 활용에 유리하다.

민간 스테이블코인 측 핵심 논거

- 발행·감독 분리

민간 발행과 정부 감독을 결합한 구조로 혁신과 안전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 기존 결제 인프라

카카오페이·토스 등 민간 플랫폼의 결제 경험과 인프라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

- 시장 경쟁

민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개선과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주제1 | 주요 반론과 종합

CBDC 지지 측은 원화가 비기축통화인 만큼 미국식 민간 육성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외환 변동성과 자본 유출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반면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측은 법정화폐·안전자산을 1:1로 담보하는 구조와 명확한 감독 체계를 갖추면 디페깅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모델은 모두 통화주권 수호와 디지털 결제망 혁신을 목표로 하지만, 공공의 신뢰·시스템 안정성과 민간의 자율성·시장 혁신성 가운데 무엇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에서 접근이 갈렸다.

논거 1

통화주권과 화폐 단일성의 수호

통화별 스테이블코인 발행 비중[1]



	미 달러화	유로화	기타 통화	총계
발행규모 (백만 달러)	252,153	413	333	252,899
발행비중 (%)	99.7	0.2	0.1	100.0

주: 1) 2025년 6월 기준
자료: DefiLlama

->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 多"

화폐 단일성과 통화주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대안
= 한국은행 CBDC

달러 패권 가속화 속,
비은행 원화 코인은 통화주권 침식 유발

논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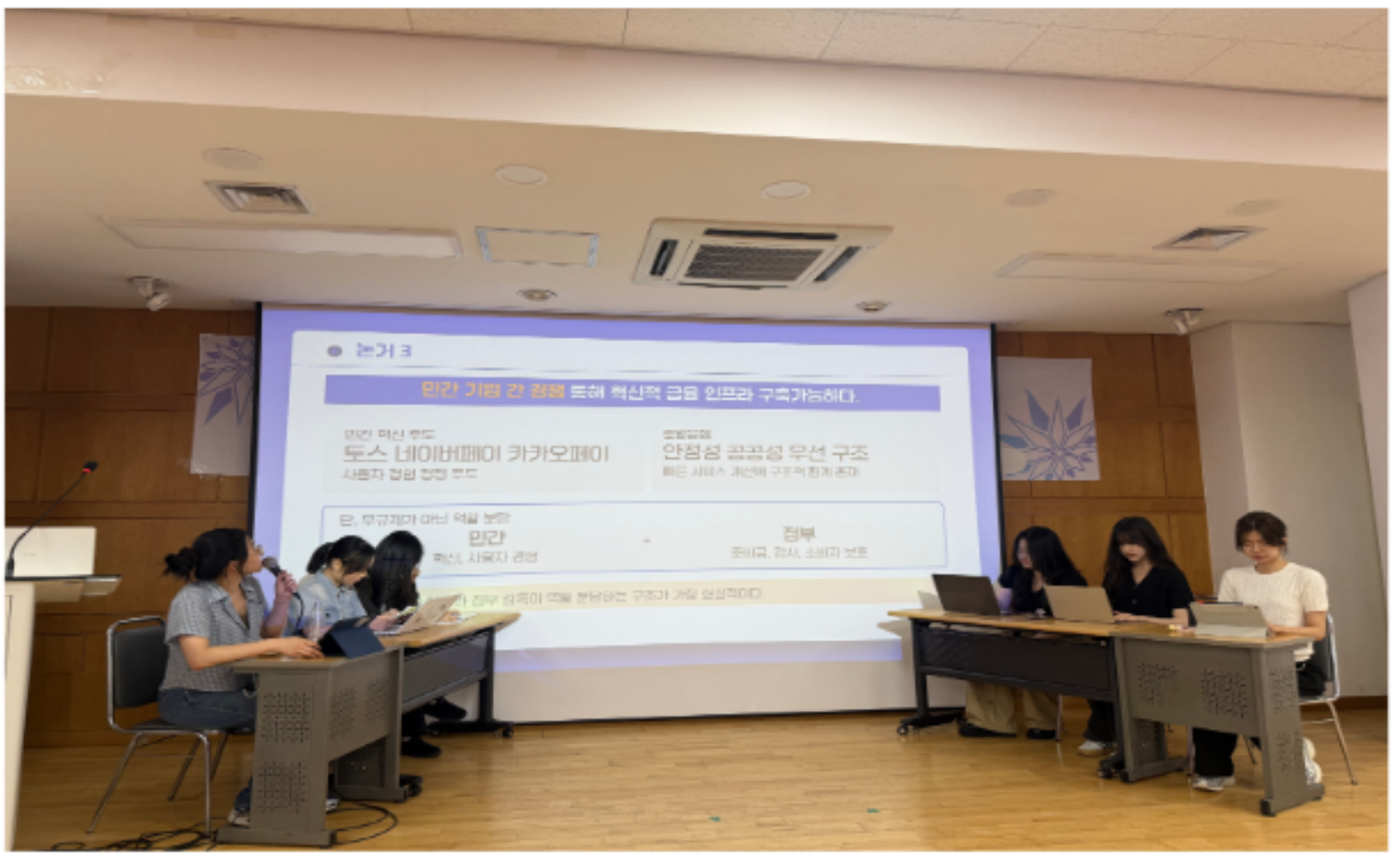
분리형 구조는 이미 글로벌 표준이다

미국 2025
GENIUS Act
준비금 요건과 감독 체계를 전제로 민간 발행 허용

EU 2023
MiCA
인가된 금융기관 · 전자화폐 기관의 발행 제도화

싱가포르 2023
MAS 인가제
100% 준비금 · 독립 검증 조건 민간 발행 인가

---> 중앙은행 단독 운영이 아닌, 민간 발행 + 정부 감독의 결합구조



주제2

생성형 AI 기반 투자 자문

자본시장에서 생성형 AI와 알고리즘 기반 투자 자문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AI가 투자 효율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지 또는 군집 행동·책임 공백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는지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찬성 측

• 운용 효율성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를 통해 자산관리의 생산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 객관적 판단

심리적 편향과 불필요한 거래를 줄이고 위험 분석을 체계화할 수 있다.

• 진입장벽 완화

낮은 최소 투자금액과 24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개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반대 측

• 군집 행동

소수 모델과 공통 데이터 의존이 확대되면 시장이 동일한 신호에 반응할 위험이 있다.

• 가격 왜곡

알고리즘의 자율적 상호작용이 담합적 결과나 비정상적 가격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환각·책임 공백

잘못된 정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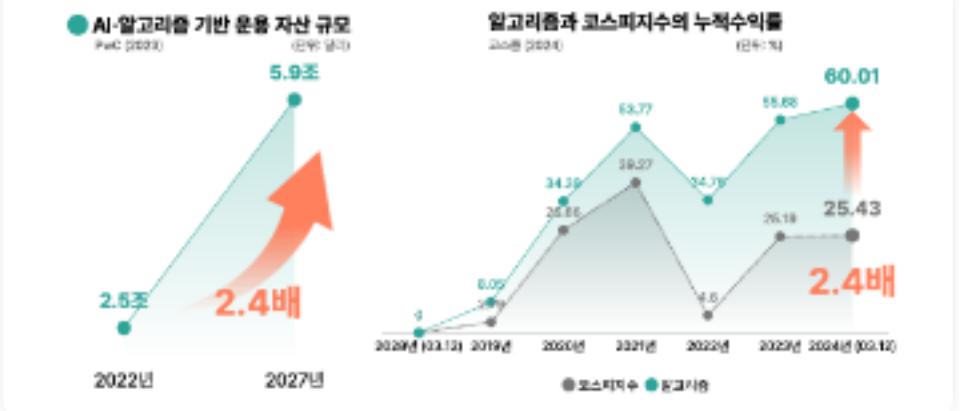
주제2 | 주요 반론과 종합

찬성 측은 알고리즘이 시장 급락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서킷브레이커 등 제도적 장치와 결합하면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반대 측은 금융기관의 AI 도입이 예측력 향상보다 비용 절감과 마케팅 목적에 가깝고,
AI 역시 인간의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므로 객관성에 대한 '안전 환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적으로 AI 투자 자문은 자산관리의 대중화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기술 획일화에 따른 거시건전성 위험과 책임 윤리 문제를 함께 관리할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Pro Side _ Argument 01

AI 투자 자문 서비스는 이미 업계에서 높은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금융 시장
실제 **투자 성과 역시 코스피를 상회**하며 경쟁력 확보



해외 금융투자업계의 AI 도입도 활발



내부 검색 AI → 전사 생산성↑
금융 전용 *LLM → 데이터 분석 효율성↑

*LLM(Large Language Model)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AI 프로그램

Con Side _ Argument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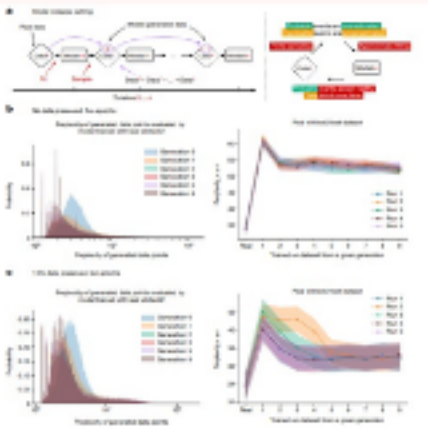
과거의 알고리즘 매매가 일으킨 단순한 가격 급락을 넘어, 인공지능은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형태의 시장 붕괴를 초래한다.

01. 소수 기초 모델의 기술 독점과 금융 시장의 단일문화(Monoculture)적 군집 행동

"AI may heighten financial fragility as it could promote herding with individual actors making similar decisions because they are getting the same signal from a base model or data aggregator. This could encourage monocultures. Thus, AI may play a central role in the after-action reports of a future financial crisis."



02. 오류 데이터 재학습을 통한 시장 가치 왜곡의 영구 고착화



*Financial Stability Board (2024) / Shumailov et al. (2024), Nature Vol. 631



주제3

AI 및 로봇에 대한 과세와 조세 정의

AI와 자동화의 확산이 노동시장과 조세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동화로 인한 노동소득 감소와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해 과세가 필요한지, 또는 혁신 저해와 이중과세·자본 이탈을 초래할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찬성 측

• 불평등 완화

공AI의 초과이윤 일부를 재분배해 기술 발전의 편익과 비용을 보다 균형 있게 나눌 필요가 있다.

• 세수 기반 보완

노동소득 중심 세원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자본·자동화 기반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

• 유연한 설계

초과이윤세·자본이득세·환경세 등 혁신 저해를 줄이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반대 측

• 혁신 저해

초기 성장 단계의 AI·로봇 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면 R&D와 기술 도입이 위축될 수 있다.

• 이중 과세

자본재 취득과 기업 이익에 이미 과세되는 상황에서 사용 단계의 추가 과세는 중복 부담이 될 수 있다.

• 자본 이탈

규제가 강해질수록 생산 기지와 기술 투자가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주제3 | 주요 반론과 종합

찬성 측은 로봇세를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제재가 아니라 자동화로 발생하는 실업·재교육·사회안전망 비용을 조정하기 위한 교정세로 보았다.

반대 측은 추가 과세가 오히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으로 늘어날 기존 법인세·부가가치세 세수를 훼손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기술 혁신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자동화에 따른 고용 구조 변화와 세수 기반 약화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딜레마에 있었다.

입론 1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부의 불균형 심화에 대한 해결책

- 기술 발전의 혜택은 자본 소유자에게 집중, 비용은 노동자의 부담

- AI로 인한 초과이윤의 일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변화하는 경제 구조 속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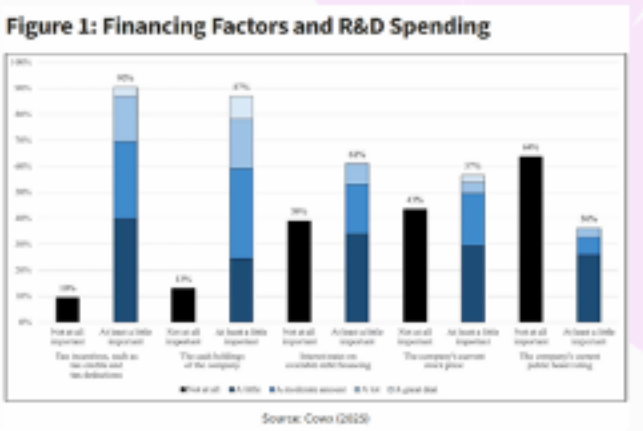
입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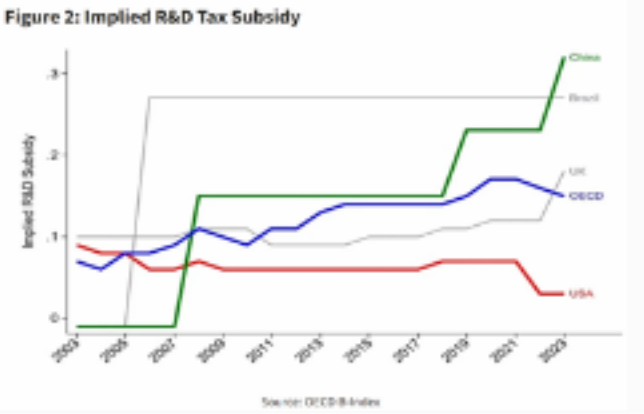
로봇세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와 로봇 기술 발전을 정체시킨다.

[현재 상황] AI 초입단계
인공지능과 로봇 시장은 이제 발전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로,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대규모 R&D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 문제] 혁신에 대한 페널티
기술 도입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규제는 기업의 도전 정신을 꺾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우려 결과] 디지털 전환 지연
과세 리스크를 피하려다 보면 결국 낡은 기존 생산 방식을 유지하게 되어 글로벌 기술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세 가지 토론이 남긴 질문

01. 공공의 신뢰와 민간 혁신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디지털 원화 논의는 발행 주체를 정하는 문제를 넘어 중앙은행·은행·민간 플랫폼·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지 묻는다.

02. AI의 효율성을 믿되, 위험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투자 접근성과 분석 효율이 높아질수록 알고리즘의 쏠림, 오류,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해진다.

03. 자동화의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과세 여부 자체보다 혁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 전환과 재정 부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복지 설계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토론을 넘어, 경제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자산, AI 금융, 자동화 과세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이 가져올 경제적 편익과 구조적 위험을 함께 살펴보았다. 각 주제는 서로 달랐지만, 기술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공통된 고민으로 이어졌다.

기술 혁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자산, AI 금융, 자동화 과세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이 가져올 경제적 편익과 구조적 위험을 함께 살펴보았다. 각 주제는 서로 달랐지만, 기술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공통된 고민으로 이어졌다.디지털 원화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공공의 신뢰와 민간 혁신의 역할 분담을, AI 투자 자문에서는 높아진 정보 접근성과 새로운 시장 위험의 관리를 살펴보았다. AI·로봇 과세를 통해서는 자동화가 만들어낼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기술 혁신의 동력을 유지해야 하는 정책적 딜레마를 확인했다.

하나의 쟁점을 여러 시선으로

입론에서 자신의 논거를 제시하고, 반론과 재반론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하나의 경제 현상도 단순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제도,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근거로 주장하고, 질문을 확장하다

각 팀은 객관적인 자료와 법·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구성하고, 토론 과정에서 그 근거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연구·분석 역량과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하나의 정답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고 여러 관점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